

한국,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검토

한국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방역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9월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해제 … 세종시는 제외

한국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인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는 집값 재상승 우려를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shutterstock

라 30~50%로 둑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사라지고 양도세, 종부세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둑어 놓기로 했다. 또 서울 전 지역을 비

롯해 과천, 분당, 수원 등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유지되는 데다, 금리 상승세도 가팔라 이번 조치로 집값이 하락세를 면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곳은 총 41곳이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이 모두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를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9월 26일부터 발효된다.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심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이날 한국의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코엔 부국장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대로 갈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10%에 달하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준수가 중요하다고 했다.

코엔 부국장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예로 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2060년에는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엔 부국장은 "연금개혁 관련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계획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기대수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연금 급여액이 굉장히 낮은데 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금이든 노후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